"5·18서 보여준 광주정신은 한국 민주화의 자부심"

문재인 대통령 독일 일간지 'FAZ' 기고문 내용

모든 국민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 국가 만들 것

평범한 사람들의 평화 위해 신한반도체제 전환이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의 기고문을 통해 "평범한 사람이 역사의 물결을 만든다"면서 첫 번째로 광주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를 "한국 민주화 과정의 자부심이자, 양보와 나눔의 '광주 정신'이 있는 도시"라고 설명했다.

◇"한국 역사의 물결은 평범한 사람이 만들어"=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사건으로 3·1 운동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촛불혁명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들의 공통점으로 '평범한 시민'이 그 중심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에 대해 "100년 전,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나무꾼, 기생, 맹인, 광부, 머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앞장섰다"고 떠올렸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국가 폭력의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낸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 운전사와 종업원들, 고등학생들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평범한 광주시민들이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보여줬던 자제력과 질서 유지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국가 폭력 앞에서도 항쟁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약탈이나 절도가 없었다는 것은 이후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자부심이며, 동시에 행동지침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2016년 혹독한 겨울 한파 속에서 이뤄진 촛불혁명에 대해서는 "촛불혁명의 영웅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적 힘"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향후 국정운영의 바탕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특히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왔음에도, 이제껏 특권층에게 성장의 과실이 몰리며 평범한 사람들이 소외됐다는 문제의식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분단은 기득권을 지키는 방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매장하는 방법으로, 특권과 반칙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이용됐다"며 "평범한 사람들은 사상과 표현, 양심의 자유를 억압받고 자기검열을 당연시하며 부조리에 익숙해졌다"고 지적했다.

◇혁신적 포용 국가 지향=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한국은 지금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포용국가는 사회경제체제를 포용과 공정, 혁신의 체제로 바꾸는 대실험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범한 사람의 일상이 행복할 때 한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며 "포용국가는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결실을 골고루 누리는 나라"라고 규정했다.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문 대통령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권선징악이라는 간명한 진실이 정의와 공정의 시작"이라며 "정의와 공정으로 세계는 성장의 열매를 골고루 나눌 수 있게 된다. 정의와 공정 속에서만 평범한 사람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양보와 나눔으로 결국 대타협을 이뤘다"면서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광주정신'이 이뤄낸 결과다"고 평가했다.

◇평범함을 위한 항구적 평화='평범한 사람을 위한 국가'를 역설한 문 대통령은 이를 떠받칠 기둥으로 '항구적 평화'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가치를 제시, 양대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꾸리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우선 '항구적 평화'의 경우, 문 대통령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평화를 강조하며 신(新)한반도체제로의 전환을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분단의 역사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눈물과 피가 얼룩져 있다. 촛불이 평화로 가는 길을 밝히지 않았다면 아직도 평화를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을 것"이라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동서독 간 철의 장막이 유럽을 관통하는 거대한 생명띠 '그뤼네스 반트'로 완전히 변모한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DMZ에만 머물지 않고 동북아시아, 유럽까지 번져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글은 독일의 권위지의 하나인 FAZ 출판부가 출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가제)'에 실릴 예정이다. FAZ 출판부는 5년에 한번 세계 주요 정상, 지도자, 종교계 인사들의 기고문을 모아 문집을 발간한다. 앞서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8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3년에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황교안, 5·18 정치적 이용 하려면 기념식 오지 말라"

보수단체 5·18폄훼 집회 예고에 들끓는 광주민심

5·18 민주화운동 제39주년을 앞두고 광주민심이 끓어오르고 있다. 올해는 5·18진상조사위원회 출범과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연·방해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5·18민주화운동 39주년에 맞춰 일부 보수단체가 광주에서 5·18 폄훼 집회를 예고한데 대해 광주시민사회단체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모인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이하 광주운동본부)는 지난 3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5·18 제39주년 기념일 전 까지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오월과 영령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제정을 지연·방해하고, 5·18 망언 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광주운동본부는 "한국당과 황 대표는 5·18 영령 앞에 사죄하고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과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정신과 5·18 민주화운동을 욕보이는 보수 적폐세력의 국립 5·18 민주묘지 앞 집회와 광주 금남로 집회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강경 입장이 나온 것은 한국당과 보수단체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사실상 '보수 결집'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과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지연·방해하고 있는 한국당 황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사실상 광주 민심을 자극하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5·18을 부정·폄훼하고 있는 일부 보수 단체가 5월18일 당일 금남로와 5·18 민주묘지 등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나선 점도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기념일 당일 광주에서 5·18을 부정·폄훼하는 집회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광주지역민들을 상대로 '역사적 도발'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열린 5·18 역사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결의를 다지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면서 강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일 오전 광주시 송정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를 마친 뒤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진상조사 등을 방해하는 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이번 기념식엔 황 대표의 참석을 분명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5월 영령에게 참배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일부 단체가 금남로 한복판에서 5·18을 농락하는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념행사를 점잖게 진행하는 모습은 저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나서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분노하고 큰 소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묘지 앞에 집회 신고를 한 것 자체가 사과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묘지 진입로에 드러누워서라도 집회를 하지 못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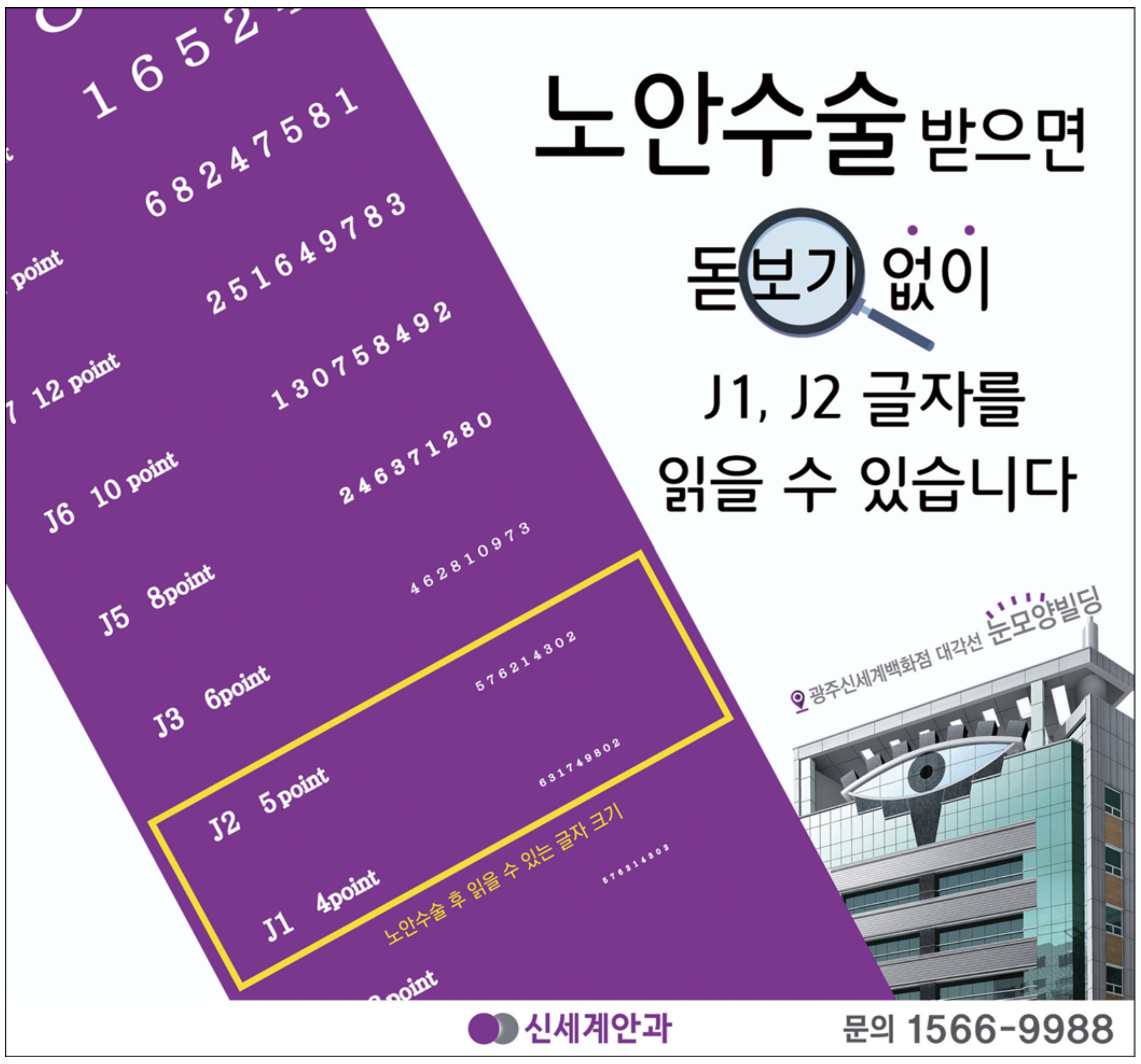
물세례 받은 황교안

광주 송정역 '규탄대회' 참석 성난 민심에 쫓기다시피 떠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지만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등에 상처를 입은 광주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송정역 광장에 황 대표가 도착하자 광주진보연대, 광주대학생진보연합 등 시민단체와 시민 100여명은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황 대표는 전날부터 시작한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이름의 1박 2일 규탄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이날 광주를 찾았다.

하지만 성난 광주 민심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당초 규탄대회를 열기로 한 광장을 벗어나 인도에서 '문재인 STOP, 전남 시·도민이 심판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건 채 행사를 시작해야 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자격 미달의 후보자를 임명하며 행정부·사법부를 장악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입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규탄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황 대표를 막아선 일부 시민이 물병에 든 물을 뿌리자 경호 인력들은 우산을 펼쳐 날아드는 물을 막았다. 황 대표는 5·18 희생자 유가족을 피해 플랫폼으로 이동, 전주행 열차를 탔다.

4일 황 대표는 광주 시민의 항의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절한 삶의 현장, 절박한 국민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